

# 정동영, “양질 일자리, 임금직불제가 답”

### “건설사들 내국인 기준 공사비 받고 외국인 고용해 부당이득 취해… 물가변동분 임금 노동자까지 전달 안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서해선 공사 17개 현장에 대해 2015~2016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늘어난 공사비가 9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변동을 고려해 더 지급된 공사비 938억원 중 308억원은 통상 하청되는 시공비(노무비+장비비)로 건설노동자와 장비운전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다.

그러나 원청 대기업에 지급된 증액 공사비가 건설업의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서 매달 채우고 해고 반복되는 건설노동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국인 임금기준으로 공사비 받고, 현장에는 임금 절반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했다.

계다가 당초 계약금액을 정할 때에는 내국인 임금기준(시중노동단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원청 대기업에 지급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는 임금이 절반 수준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그만큼의 노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절감된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행 중인 5개 공사현장에 최근 3개월간 투입된 노동자는 총 45,100명이며 그 중 외국인이 8,794명으로 19%를 차지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7월 붕괴사

고 발생했던 전남 영광 칠산대교 현장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투입인원 308명 중 204명(66%)이 외국인노동자였고, 외국인노동자가 받은 일당은 최저 74,038원에서 최고 87,560원이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결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평균 일당이 153,000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발주자는 계약 시 내국인 임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지급했지만, 건설사들은 하청을 통해 당초 계약과 다르게 임금이 절반 수준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발주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물가변동을 고려한 공사비 증액까지 해주는 것은 관료들의 ‘관행적 무감각’의 소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이미 일상언어가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헬조선 탈출’을 위해 공공에서 81만개 일자리를 국가재정으로 만들겠다고 부르짖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직불제도가 정착돼 책정된 임금만 제대로 지급되면 건설 노동자가 월 350만 원대의 임금을 받게 되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수십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이것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며 가장 쉽고 빠른 일자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더민주 원주 청년위원회’ 여성청년위원 임명장 수여식

‘더민주 원주 청년위원회’ 여성청년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지난 21일 봉동읍사무소 3층 강당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내빈으로는 김춘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 박성일 원주군수, 송지용 도의원, 정성모 원주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등과 원주민들이 참석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발대식을 기점으로 우리지역의 양성평등의 가치가 바로서고 여성청년의 힘이 더욱 응집되어 어르신과 아이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완주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윤정 여성청년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권위적이고 허울뿐인 자리가 아닌 소통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성청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겠다”며 “군민들과 당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윤정 위원장은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인 당원 활동과 교육이수의 공로가 인정되어 다수의 표창장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봉동읍소재 한길요양병원에서 사회사업실장(사회복지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윤정 위원장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료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조정 해결하여 내과와 동시에 의료진과 협의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일을 맞은 환자들에게 어르신 생신잔치를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축하공연을 열어주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진성 기자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지난 20일 오후 충북 충주 호텔 더베이스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37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저임금 상승 따른 농가부담 해소 대책 마련돼야”

### 송지용 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송지용 운영위원장은 지난 19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충청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송지용 위원장은 “농촌의 현실은 탈 농촌현상 심화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태인데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농업

현장이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호 개정 촉구 등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이 송지용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유성엽 “문화재보호법 위반 ‘숨방망이’ 처벌 그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숨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숨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재 밀반출 8건, 도난·은닉 21건, 문화재 무단현상 변경 19건 등이었다.

문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숨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보호법 90조와 92조에 따르면, 문화재 밀반출과 손상·은닉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지만, 문화재 밀반출의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었다. 총 21건의 손상·은닉 또한 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고, 단 2건의 징역 처벌도 2년에 그쳤다. 문화재 무단현상변경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부분 기소 유예 내지 행정명령조치(원상복구)로 처분됐다.

실례로 보물 제1606호인 불상 복장물(미륵불상 2점)을 절취하여 밀매하려다 적발된 사건과 보물 제825호인 익산송림사보광전을 불법 토사굴착하고 수목을 제거해 훼손한 사건 등 국가보물 및 사적관련 사건들마저도 기소 유예로 처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를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의 단속 역량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범 단속반 본부에 단 3명의 인원만 근무하고 있고, 지방청에는 그나마 한명도 없다. 이 같은 인력의 부족은 그대로 실적으로 이어져, 최근 5년 간 도난 신고 접수현황은 총 69건(2,147점)이지만, 실 사건처리(회수)는 12건(762점)에 불과하다.

/김진성 기자

## 신고리 ‘재개’ 59.5%… 공론화촉 ‘건설 재개 권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논란은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의결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다. 이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무관하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 유지’를 선택한 비율은 35.5%, ‘원자력 발전 확대’를 선택한 비율은 9.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더불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 마련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넣었다.

/뉴시스

아름다운 장수의 가을풍경이 여러분의 추억 여행의 행을 책임집니다!

장수만세

NAVER 장수군청 검색